

# 전남도 청사 일대 주차난에 '아수라장'

### 직원 편의 봐주기식 청정 단속·5부제 형식 운영 원인 면수 1,300여대 불과 타 지자체 '적극 행정' 과 대조

전남도 청사의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형식적인 차량 5부제 운영과 함께 공직자 편의 봐주기 등 관리 소홀에 주차면수 부족이 겹친 결과다.

청사 개청 이후 주차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남도는 뾰족한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제기돼 온 주차난 해결책 마련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사 주차면수는 A구역 236대, B구역 123대, C구역 192대, D구역 107대, E구역 183대, F구역 371대, 의회 주차장 76대 등 총 7개소

1,288대다.

직원·민원인 수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면수로, 이에 따른 주차 불만은 청사 이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한 모양새다.

실제 이날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 1·6번은 F주차장 이동 대상이었지만, 주차장 곳곳에는 관련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5부제가 자율로 운영된다 보니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페널티를 줄 수 없어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5부제를 피해 내부로 미처 진입하지 못

한 차량들은 주변 도로에다 불법주차차를 일삼는 등 청사 주변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다.

청원경찰들의 직원 편의 봐주기식 대처도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직원차량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을 항의하는 민원인들에게 '국민신문고나 도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는 식의 무사안일한 업무태도가 발생하고 있다.

직원·민원인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협소한 주차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전남도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타워 준공·유료화 전환 등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타 지자체들과 대조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요금정산시스템, 차량

단기, 번호인식기 등 설비공사를 마쳤다. 시는 연내에 요금 등 세부 운영계획안을 마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장을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흐름과 주차난이 심화하는 현실을 고려해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광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함평군도 민원인·직원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청사 인근 3,119㎡ 부지에 140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 준공을 마쳤다.

전남도 관계자는 "120억원이 드는 조립식 주차장 건립을 검토했지만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방본부 이전·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이 완료되면 상주직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 시, 내일 국회서 달빛내륙철도 건설 포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사업 조기현실화 논의

광주시는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주·대구시 등 14개 경유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25명 공동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다.

포럼에서는 내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 조기현실화를 목표로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건설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광주대 최완석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회를 실시한다.

광주시 등은 앞으로 1,400만명에 달하는 시·도민 여원을 담아 6개 광역자치단체와 지역정착권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공동 건의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은 14개 경유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영호남을 하나로 묶어남부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내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드시 반영돼 조기착공과 개통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광주-대구 간 203.7km 구간의 고속화철도 사업으로,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총사업비 4조원대 대형 국책사업이다.

/황애란 기자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가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신청실명제로 전남도정 '한눈에'

현안사업 등 공개...30일까지 운영

전남도는 도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주요 정책 추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올해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도민이 알고 싶은 정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이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다.

사업 추진 근거와 참여 공무원 설명, 추진현황 등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공개된다.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전

남도가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 및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국민신청실명제' 메뉴를 통해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담당자이메일(meeinglang79@korea.kr) 또는 우편(전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1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오는 12월 중 정책설명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전남도 누리집에 해당 사업 주요 내용과 이력 등이 게시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 이 시장 "민간공항 이전문제는 연립방정식"

"엷힌 실타래 가위로 잘라야"...전남도 협력 전제 상생 모색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광주시권익위원회의 민간공항 이전시기 유보 정책권고안과 관련, "시민의 뜻을 반영해 가장 현명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하고 "시민권익위 권고를 따를 것이냐, 2021년까지 약속대로 옮길 것이냐의 단순한 일차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이다"며 "일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 80%는 군공항과 연계해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며 "그 안에 상생의 길, 광주·전남 공동 번영의 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권익위, 민간공

향 이전 연기하라-이용섭 시장의 선택은?'이라는 글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이 시장은 글에서 "광주시민 80%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주었다. 시민들의 답변에 해법이 있고, 광주·전남 상생과 미래 번영의 길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뜻을 받들면서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보겠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남도가 조급한 협력해준다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엷힌 실타래는 계속 풀려고 하면 해결이 잘 안될 때가 많다"며 "너무나 어려운 문제는 가위로 자르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광주·전남 상생의 길을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거부하느냐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전남도의 협력을 전제로 상생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광주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권고문을 이용섭 시장에게 제출했다. 정책권고문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시기 유보, 소통·협력 강화, 법·제도 개선, 이전공항 명칭에 '광주' 포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 5개 항이다.

/황애란 기자



# 전남도민고충처리위 첫 발 땀다

### 법조·시민단체 등 전문가 9명 구성

도민의 고충민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전남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첫 발을 땀다.

전남도는 16일 전남도청 정약용실에서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고 본

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직과 위원장 선출에 이어 곧바로 2건의 고충민원에 대한 주심위원 및 조사관의 검토보고, 안건 심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전남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치됐다.

참여위원은 학계 인사 3명을 비롯 변호사 등 법조계 2명, 시민단체, 건축사, 전·현직 공무원 각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4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 논의 사안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운영제도 개선 권고 등의 형식을 통해 도와 시·군 행정에 반영하게 된다.

/길용현 기자

# 도-㈜세원생명공학, '유용수산물 연구' 협약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 도내 우수한 유용수산물들의 종자생산과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세원생명공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과학원과 ㈜세원생명공학은 펠타이드를 이용해 유용수산물 인공종자 초기 폐사를 저감 및 성장도 향상, 기존 양식품종 건강성 확보를 이룰

어 환경 적응능력이 강한 품종과 미래 고부가가치 품종을 개발하는데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전남의 수산생물양식 분야에 기능성 물질인 펠타이드를 접목, 기존 양식품종 생존율 증대와 성장 등을 통한 경제성 향상은 물론 미래 수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품종 개발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원생명공학은 지난 2013년 설립해 펠타이드 소재를 기반으로 신약 및 동물용 의약품 개발, 생물자원산업화에 주력 중인 서울 소재 바이오벤처 기업이다. 현재 74종의 특허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특허물질들을 이용해 명태·한라리새우 등의 초기 치어 생존과 성장을 높이는 기술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길용현 기자

국제비즈니스호텔

새롭게 다시 만나는 W-STAY 국제비즈니스호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단체예약 환영

문의 : 062) 673-070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8 (주월동 1287-2)